



결집력·추진력 약한 불교계

우리 불교도들의 결집력과 추진력이 미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고질병의 하나다. 그 병의 원인은 불교가 스스로 지니고 있는 힘과 능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방법이 구축하지 못해서 비롯됐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불교계는 큰 사건이 터져도 제대로 한 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 점은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타종교와 비교해 현격한 차이가 느껴진다. 1970년대부터 민족복흥과 운동을 목표로 전방위적 선교활동을 벌인 개신교는 교류와 협의, 지원 등을 공유하면서 반정부 운동 학생과 일반지도자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신도로 만들어 나갔다. 반면 불교는 승단의 간단없는 분쟁으로 근심의 나날이었고, 분쟁에 매달리다 보니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어려웠다. 심지어 '민중불교운동'이라는 작으나 큰 불꽃마저도 살려내지 못했다. 그러한 '포교' 사명 아래 힘 모으기 시급하고 지금은 내세울 불자가 별로 없는 것이 어찌 면 당연하다. 이제 '불교도의 힘 모으기'가 필요하다. 불교계에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000만 신도를 자랑하는 불교계가 그간 이 나라 최대 종교라고 떠들던 시대가 지났다는 현실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불교계가 결집력을 갖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전향적 사고와 지도력이 요구된다. 불교의 발전과 힘의

구축, 응집력을 갖추는 데에는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님들은 재가불자들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활동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 '포교 제일주의' 여야 한다. 스님들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법회를 제외하고 세력을 기르는 것은 오늘날 불자들의 책무인 것이다. 셋째, 대승 보살 불교가 돼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적, 정치적 사회적 불교 소외 현상은 우리 불교계가, 아니 스님들이 재가 불자들(신도회, 청년회 등)을



가사 장삼 속에 가두어두고만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심사숙고해 볼 일이다. 넷째, 불교 회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개신교가 YMCA, YWCA 등 설립해 노동, 농어촌, 빈민 운동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을 배워야 한다. 앞으로 전국 각 지역에 불교 회관이나 청년회관이 마련돼, 그곳에서 포교와 사회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보수와 삼보정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 레아만 불교도간 결집력을 높일 수 있고, 사회문제에 불교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힘은 말에 있지 않다. 오로지 현장에서 행동하고,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보다 많은 결집과 추진동력은 관리와 동기부여에 따른 설득력을 가진 지도력에 있다. ■ 배영진(대한불교청년회 지도위원)

출·재가 적극적 의사표현 필요

‘포교’ 사명 아래 힘 모으기 시급하고 지금은 내세울 불자가 별로 없는 것이 어찌 면 당연하다. 이제 '불교도의 힘 모으기'가 필요하다. 불교계에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000만 신도를 자랑하는 불교계가 그간 이 나라 최대 종교라고 떠들던 시대가 지났다는 현실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불교계가 결집력을 갖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전향적 사고와 지도력이 요구된다. 불교의 발전과 힘의

구축, 응집력을 갖추는 데에는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님들은 재가불자들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활동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 '포교 제일주의' 여야 한다. 스님들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법회를 제외하고 세력을 기르는 것은 오늘날 불자들의 책무인 것이다. 셋째, 대승 보살 불교가 돼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적, 정치적 사회적 불교 소외 현상은 우리 불교계가, 아니 스님들이 재가 불자들(신도회, 청년회 등)을

봉사활동 정부지원 받는다

정부, 자원봉사활동진흥법 초안 내놔...불교계도 준비

정부가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을 입안, 7월 12일 공청회를 거쳐 초안을 발표했다. 관련 법제정 논의가 있는 지 10년만이다.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불교계를 비롯 관련 단체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선 이번 법안의 핵심은 봉사자 및 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적 지원 및 예산, 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봉사자 보호 차원의 상해보험제도 도입 △ 봉사단체 출연 기금의 조세감면 △ 국가 및 지자체의 봉사센터 설립 시 국·공유 재산 무상사용 등 굵직한 지원책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체계적인 지원 틀을 갖춘 셈이다.

조직적인 봉사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명시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뒤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 제도개선 등을 맡게 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한국자원봉사협회가 중심축으로 서게 했다. 또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이 운영케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 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봉사자 교육, 파견, 보상, 재교육 등 불교계 자원봉사 시스템이 갖춰지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교계의 준비는 아직 '결음마 수준'이다. 범종단 차원의 봉사단체가 없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법안에서 지역 봉사센터의 운영 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못 박은 것과 관련, 불교계는 마땅한 지역 단위 복지법인체가 없어 '그림의 떡'이다. 또 센터를 운영할 전문 지도자도 인사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 불교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범종단적 '불교봉사단체

협의회'를 조속히 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기존 불교계 복지법인 및 봉사관련 단체의 인적·물적 자원 및 현황을 파악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자원봉사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불교계는 법안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복지법인, 산하 위탁 복지관, 조건부 시설 등 정부의 허가 기준과 상관없이 전폭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구 역할을 해야 한다.

진각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은 "지원 대상 범위를 복지시설, 봉사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관을 총망라해야만, '생식내기식' 법안이 되지 않는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로 불교계는 물론 국가 차원에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선원 직능의원에 종열스님 조계종 중앙총회 보궐



조계종 제13대 중앙총회회의원 직능대표(선원) 보궐선거에서 종열스님(前 총무원 후보부장)이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0차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앙총회의원 선원 직능대표에 종열 스님을 선출했다. 종열 스님은 1965년 사미계, 75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여수 한산사, 구례 화엄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포교사 101명 복권 조계종, 봉은사서 연수

조계종 포교원이 '일반포교사 자격복권자 연수회'를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강남 봉은사 보우

당에서 개최했다. 자격복권자 연수회는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포교사 자격을 갱신하지 못해 포교 활동을 벌이지 못하거나 자격을 할지 못한 역량 있는 포교사들 중 신청에 한해 포교사 자격을 다시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포교부장 일관 스님, 포교국장 선웅 스님,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을 비롯한 50여 명의 포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01명의 일반포교사들이 자격을 복권했다. 김은경 기자

“관계법 개정 노력할 것” 우리당 불지의원 법정스님 예방

열린우리당 권선배, 김영주, 오영식, 이광재, 이영호, 이은영, 최재성의원 등 7명은 7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정 스님을 예방해 조계종에서 최근 각 정당에 요청하고 있는 불교관계 국가법률 개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의원들은 불교계 현안인 법률 개정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사진=박재만 기자

조계종 스님들의 습의(習儀)를 종단차원에서 통일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한 '전문습의사' 제도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정희은)은 이와 관련해 7월 20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윤원장 간담회를 열고 전문습의사 제도 시행을 위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송광윤원장 지원, 해인 윤원장 해능, 총무원 총무부장 무관 스님 등은 전문습의사 제도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데

윤원생들이 행사교육원 기간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습의를 지도해왔기 때문에 습의교육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행사교육원 개원 하루 전에 열리는 '습의예행회'에서도 각 윤원에서 파견된 습의사들 사이에서 의식을 통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육원 관계자도 "지난 2000년에 종단차원의 <습의교안>이 발간 되었지만, 이후에도 각 윤원 사이의 습의가 완벽하게 통일돼 있지 못하다"

“전문습의사 제도 필요하다”

조계종, 윤원장 간담회서 공감 9월 제도시행 준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습의교육 관계자가 모두 모이는 9월, 제27기 행사교육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도시행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습의사는 스님들의 수행일과, 행동거지, 의식 등을 배우는 일에서부터 예불과 참회에 이르기까지 습의예행(習儀禮儀) 전반을 연구·교육 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의식과 습의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가능해지고 각종 연수·행사교육·수계산림 등에서 상시적인 습의 교육이 가능해진다. 실질적 삼강 중무직의 개념이다. 지금까지는 습의사는 주로 계율을 배우는 윤원에서 파견된

며 체계적 전문인력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습의사 관련 법령의 제정, 인력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위상과 권한에 대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해인윤원장 해능 스님은 "전문습의사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몇몇 되지않는 윤원 졸업자 가운데서 중무직 전문습의사 선발하기보다, 윤원 연구생 가운데서 습의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며 실제 제도시행 후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우려하기도 했다. 조용수 기자

상임포함 새 이사 7명 선출

종단협 정기총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 이하 종단협)는 7월 21일 서울 하림각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3년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 보고의 건과 2004년 사업계획안 등을 승인했으며, 총지중 우승 총리원장, 조계종 총무부장 무관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지일 스님 등 3명을 새 상임이사로, 대승종 총무원장 해심 스님 등 4명을 새 이사로 각각 선출했다. 또 안건으로 상정됐던 정기회

비 및 사업분담금 체납조치의 건과 신규종단 등록의 건 등은 상임이사회 권한을 위임해 처리하기로 했다.

종단협 회장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사업과 논의를 벌여 회원종단의 화합을 도모하고 불교의 역량을 키우는데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고침 본지 483호 6면 양주 백화암 기사 중 주지 스님법명을 '보인'으로 고침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울 스님에 대한 폭력 사건을 규탄한다’

지난 6월 3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24시간 단식농성 중인 지울 스님이 공권력에 의해 실신하고 억류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7월 17일 오후 1시경 청와대 앞에서 경찰은 관광버스를 타고 온 '도통의 친구들' 부산 회원들의 청와대 앞 진입을 2시간 동안 방해하며 이들의 차 자체를 저지했다. 뒤이어 경찰은 회원들을 맞이하려고 청와대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지울 스님을 원력으로 저지했으며, 저지 이유를 묻는 지울 스님에게 일체의 대답도 없이 1시간 여를 에워싸 사실상 감금상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단식으로 허약해진 지울스님이 급기야 30여분간 실신상태로 방치되는 어이없는 사태마저 초래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고속철도 천성산 관동노선을 백지화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약속을 지키라고 단식으로 외치는 수행자에게 청와대가 해줄 수 있는 응답이란 고작 이렇게 반인륜적인 것 뿐인가? 못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진 지울 스님의 단식농성은 이미 스무 날을 훌쩍 넘기고 있건만 청와대의 유증한 절정은 미동도 할 줄 모른다. 진정 '무시가 최선의 대응'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쉬쉬하고만 있으면 될 것으로 믿는다면 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오만이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둔다.

-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은 지울스님에 대한 반인륜적 폭력 사태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라.
- 정부는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에 대한 재판 종결시까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고속철도 천성산 관동노선 백지화를 이행하라.
- 정부는 천성산 구간의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재실시하라.

위 요구의 수용이 거부된다면 우리 모두는 현 정권의 반참여적, 반영화적, 반응성적 행태에 맞서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한다.

2004년 7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 조계종포교사단 대한불교전국신학인연합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불교여성개발원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불교연합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두레생태기행 사찰생태연구회 보리방승모니터링 불교인권위원회 인드라양명공공단체 조계사청년회 불교환경교육원 맑고향기롭게 우리는선우 불교환경연대(이상 20 단체)